

##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학적 연구\*

정용택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I. 들어가는 말

### II. 노동하는 인간의 문제로서 4차 산업혁명

1.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
2. 일자리 소멸과 대량실업의 발생
3. 생산성 역설

### III.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의 위기

1.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2. 불완전 고용 및 불안정 노동의 확대
3. 노동의 외부화

### IV.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평가

1. 불안정성의 일상화
2. 참여의 기준과 참여정의
3. 노동담지성과 참여소득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12>

\* 이 논문은 202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20S1A5B5A17091995).

---

• ABSTRACT •

---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and Reconstitution of the Labor Socie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Social Ethics**

Chief Researcher, Jeong, Yong Taek (Christian Institute for the 3rd Era)

The crisis of labor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racterized by the explosive expansion of under-employment and precarious work, not large-scale job destruction or mass unemployment, as the automation discourse argues. Therefore, labor society is not confronting the end, but rather the form of organizing social labor is transformed. At the same time, it is being reconstructed as a society where capital's dominance is still carried out by means of labor. The labor crisi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should be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transformation and reconstruction of such a labor society. In the labor society, we encounter a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a new precarious working class called Precariat is the center of the labor regime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is phenomenon yields social severe in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social ethics. This article diagnoses the crisis of the labor socie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ethically judging such problems based on the criterion of participation.

**Key word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ecariatization of Labor, Precarity, Criterion of Participation, Justice of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come

---

## I. 들어가는 말

지난 2016년 1월 제46회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하에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나노와 바이오 공학으로 대표되는 최첨단의 기술혁신이 현재 우리 삶과 미래 세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불과 3개월 만에 그 내용이 집약된 『클라우스 슈바브의 제4차 산업혁명』이 출간되면서 이 새로운 용어는 한국의 정책 당국과 산업 현장을 필두로 사회의 전(全) 영역에서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수용되었다.<sup>1)</sup> 이 용어가 등장한 2016년에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설치 결정되었다. 2017년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후보임을 자처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2017년 5월, 출범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전(前)정부의 기구를 해체한 후 대통령 직속으로 총리급의 민간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더욱 격상된 형태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지금까지도 운용 중이다.<sup>2)</sup>

따라서 이제 이 개념을 한낱 신기루로 치부하기에는 국가주도의 정책적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큰 파급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체 없는 허구로 간주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독일을 위시한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신자유주의적 국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조업 혁신 전략인 인더스트리 4.0(과 그 상보적 기획인 노동 4.0)이라 간주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은 사회통합에서 노동의

1)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바브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메가스터디북스, 2016).

2) 한국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해온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윤정현, “한국사회의 4차 산업혁명 수용과정과 대응전략의 시사점,” 『국가정책연구』 32(2018), 21-53을 참조하라.

중심성이 유지되면서도 동시에 자본의 관점에서 노동이 점점 가치를 상실하는 모순적인 양상으로 노동사회가 변형 및 재구성되고 있음을 실증하는 정책적·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주도적 발전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데올로기적 현실 구성의 실제적 효과를 인정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이 자본주의적 노동사회를 변형 및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초래하고 있는 주된 윤리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신학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가장 주된 윤리적 문제를 대체로 신학 연구자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이나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노동의 종말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대량실업이 발생한다는 예측이 ‘사실부합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현재의 산업 발전 단계를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에서 주된 논거로 제기되는 ‘생산성 역설’의 문제를 짚어본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신학 분야의 윤리학적 연구들이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 의존하여 논지를 전개해왔음을 드러낸다.

III장에서는 앞서 제기된 두 가지 쟁점들에 관해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과 전혀 대조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하여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론은 첨단 기술혁신과 자동화가 곧바로 일자리 소멸과 대량실업으로 표현되는 노동의 종말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과는 노동의 미래를 전혀 다르게 전망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소멸이나 대량실업의 발생이 아니라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동역학이라는 논점을 도출한다.

IV장에서는 앞장의 논의에 기초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의 위기를 특징짓는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삶 전반에서 불안정성의 일상화라는 윤리적 문제를 낳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의 문제를 기독교사회윤리학적으로 판단하는 데 적합한 윤리적 기준으로 아르투르 리히가 제시한 ‘참여의 기준’을 도입한다. 참여의 기준에 입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에 의해 수반되는 불안정성의 일상화는 ‘참여정의’를 훼손하는 사회적 부정의로 규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성의 일상화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행위의 준칙으로 ‘노동담지성’ 개념을 소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참여소득 정책’을 탈(脫)노동사회를 향한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제안한다.

## II. 노동하는 인간의 문제로서 4차 산업혁명

### 1.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들로 거시적 차원에서 과학 기술의 권력화, 인간의 자율성의 통제 가능성의 의문, 연구 윤리의 확보, 연구 과정에 대한 윤리적 규범 설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sup>3)</sup> 국내의 신학 연구자들은 대체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당면한 가장 큰 ‘윤리적’ 문제를 노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논점을 제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김혜령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 발생하는 실업과 미취업의 상태를 산업구조의 급진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이거나 부수적인 피

3) 유경동, “‘포스트-휴먼’(post-human)과 과학 기술: 4차 산업과 기독교 윤리학의 과제,” 『신학사상』 183(2018), 117-120.

해로 인식하는 주류의 인식”에선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개인들의 삶이 일자리 통계상의 숫자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결정적으로 부재”한다고 비판했다.<sup>4)</sup>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에 재빠르게 적응할 수 없는 대다수의 희생자들의 삶의 고통을 기독교 윤리가 다루어야 할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주제”로 상기시킨 바 있다.<sup>5)</sup> 그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나 기억력 정도를 대신하는 데에 머물렀던 기존의 기계-전자 기술이 생산라인 노동력을 일부 대체하는 데에” 그쳤던 반면, 현재 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상품의 모든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물류과정의 자동화를 100% 상용화하는 단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sup>6)</sup> 그렇기에 “휴머노이드 기술이 ‘장착된’ 사회에서 4차 산업 신기술들의 특허권과 소유권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인간은 ‘노동하는 자’로서 자기 존재의 무가치함”, 즉 “노동의 무게를 짊어지는 기회 자체로부터 소외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7)</sup>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이 새로운 형태의 소외는 “단순히 노동자의 형이상학적인 권리 차원의 문제를 넘어, 노동력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존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적 동물 대다수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학은 “인간의 기본권, 특히 생존과 행복 추구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교회와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여 있다.<sup>8)</sup>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삶의 질 개선을 물질적·디지털·생물학적 측면에서 조망하는 조성호 역시 특히 “과거 인간 노동력이 담당하던 부분을

4) 김혜령, “제네바 종교개혁 정신에 비추어 본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기본권 보편보장 제도 성찰,” 『신학사상』 178(2017), 159.

5) 위의 논문, 155.

6) 위의 논문, 157.

7) 위의 논문, 158.

8) 위의 논문, 158-159.

무인 운송기구, 첨단 로봇, 신소재 개발 등이 대체한다는 뜻으로 기계를 통한 시스템발달의 극대화를 상징”하는 물질적 측면의 변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될 때 “인간 노동력의 가치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며 특히 여성들을 포함한 저학력 계층의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전개될” 것이라 전망한다.<sup>9)</sup> 그는 “2030년까지 현존하는 지구상의 직업들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2012년 TED 강연 보고서의 예측에 근거하여 “자본 공급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각종 세금이나 노동 관련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특정 개인들을 원하는 기간에 한정해서 고용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래할 것이며, 이러한 고용 패러다임이 일반화되면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노동자의 인권이 국가의 보호는 물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0)</sup>

이와 같이 “초연결 지식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려는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sup>11)</sup>이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생명공학, 사물 인터넷, 그리고 모든 분야의 융합을 통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인지하고 공유하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증대시켜가고”<sup>12)</sup> 있는 현실에서, 신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제공할 기술적 혜택과 동시에 노동과정에 초래할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공급과 관련된 노동과 생산 부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사회 전반에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 그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면 대중들의 삶 전반에서 소외 현상이 가중되고 삶의

9) 조성호,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8(2018), 153, 156.

10) 위의 논문, 156.

11) 유재덕, “4차 산업혁명 시대 신학교육의 방향,” 『신학과 선교』 57(2019), 179-180.

12) 박용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 사회생태윤리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41(2018), 103-104.

질 역시 기술발전과 괴리되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여 조영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단순히 기술적 변화와 발전의 문제를 넘어 “기술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삶의 변화 문제”, 더 정확히는 “일하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조건에 대한 문제로 재규정한다.<sup>13)</sup> 이러한 재규정이 가능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경제와 노동의 영역에서 실업과 불평등의 문제, 부의 분배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체의 개념에 대한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인간 노동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인간 삶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따라서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생산의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의해 일자리가 급격하게 소멸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극대화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악화시키는 노동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노동 없는 노동시장’에선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일상적인 업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서 “업무는 임시적인 형태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sup>15)</sup>

## 2. 일자리 소멸과 대량실업의 발생

앞서 살펴본 신학 분야의 윤리학적 연구들은 4차 산업혁명이 수반하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의 전면적 파괴로 인해 임금노동이 더 이상 중심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삶이 재조직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술 결정론적 성격을 지닌 ‘자동화 담론’(automation discourse)의 직접적인

13) 조영호, “4차 산업 혁명과 노동윤리,” 『성경과 신학』 89(2019), 61, 58.

14) 위의 논문, 62.

15) 위의 논문, 63.

영향하에 놓여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sup>16)</sup>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슈밥이 노동의 종말론을 전개해온 것처럼, 위에서 살펴본 신학 분야의 윤리학적 연구들 역시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고용 없는 성장”, “노동 없는 사회”의 문제, 즉 일자리 소멸과 대량실업의 발생을 4차 산업혁명이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윤리적 쟁점으로 정식화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7)</sup>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신학 분야의 윤리학적 연구들이 대체로 자동화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평가가 타당하다면, 이제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과연 ‘사실부합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기독교사회윤리학은 ‘제도’ 혹은 ‘제도적인 것’을 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제도적인 것을 분석 및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기독교사회윤리학은 그 연구의 논리적 절차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 제도적인 것의 현실을 투명하게 인식하고, 이어서 그것의 윤리적 문제들을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구상을 제안하는

16) 자동화 담론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경제사학자 베너너브(Aaron Benanav)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Aaron Benanav,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Work*, New York: Verso, 2020. 그는 자동화론자들의 핵심적 논점이 중단 없는 기술혁신이 직접적 인간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는 예측에 있다고 보며, 대표적 저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ric Brynjolfsson & Andrew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이한음 역, 『제2의 기계시대』 (서울: 청림출판, 2014); Martin Ford, *Rise of the Robots*, 이창희 역, 『로봇의 부상』 (서울: 세종서적, 2016); Carl Frey & Michael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2017), 254-280. 슈밥은 바로 이에 준거하여 자신의 4차 산업혁명론을 구성했다. 김석관, “산업혁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학기술정책』 1(2018), 115-116. 따라서 자동화 담론의 기술결정론적 성격에 대한 비판은 슈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17) 조영호, “4차 산업 혁명과 노동윤리,” 57-58.

과정으로 전개된다.<sup>18)</sup> 그런데 제도적인 것의 현실을 투명하게 인식하여 그것의 윤리적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것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sup>19)</sup> 제도적인 것의 현실을 투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것의 현실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서 기술적이고 설명적인 언어영역에 속하는 ‘사실부합적인 것’에 대한 사회과학적 진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20)</sup>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앞서 살펴본 신학적 진단들이 ‘사실부합적인 것’이 되려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이 현재 정말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대량실업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باط의 4차 산업혁명론이 주장하는 상황, 즉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소멸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통계적 근거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슈باط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노동의 헤아릴 수 없는 다양성이 전(全)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precarisation

18) 인문·사회과학적 현실분석을 기독교사회윤리학에 매개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강원돈, “교의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위치,”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57-68을 참조하라.

19) 위의 논문, 57.

20) 위의 논문, 61;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Bd.1,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강원돈 역, 『경제윤리 1: 신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의 원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85-92. 참고로 리히의 『경제윤리』의 영어판(*Business and Economic Ethics: The Ethics of Economic Systems*, 2006)은 한글판에서 ‘사실부합적인 것’으로 번역된 ‘das Sachgemasse’를 그것이 “일반적인 어법에서 ‘객관적인 것’이라는 개념과 결합되어 있다”는 리히의 설명에 근거하여 ‘사회적·과학적 정확성’(social-scientific correctness) 또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것’(the scientifically correct), ‘과학적 정확성’(scientific correctness)으로 의역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부합적인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제도적인 것을 다루는 기독교사회윤리학의 관점과 방법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되기 위해선 사회과학적 타당성을 내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of labor)를 주장해온 스탠딩(Guy Standing)의 지적대로, 노동의 종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OECD 국가들과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 시장경제에서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수로 정의되는 일자리의 수(취업률) 자체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sup>21)</sup> 더욱이 그러한 노동의 다양성과 총량의 증가가 사회적 삶에서 노동의 중심적 지위를 무너뜨리기는커녕 도리어 노동의 중심성을 강화해왔다.<sup>22)</sup>

물론 기계에 의해 인간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전면적으로 퇴출될 것이라는 익숙한 주장은 2010년대에 4차 산업혁명론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즉 1990년대 중반에 노동의 종말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도 이미 체계적으로 반박된 바 있다. 예컨대, 미국의 자율주의 정치철학자 카펜치스(George Caffentzis)는 리프킨으로 대변되는 노동의 종말론을 비판하면서 노동일(勞動日), 노동연(勞動年), 그리고 임금노동자의 수가 1973~74년 에너지 위기 이후 미국에서 상당히 증가했음을(그리고 OECD 수치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함을) 보여주는 일련의 증거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요점은 노동의 다양성이 공식적인 임금노동의 차원을 벗어나 확대되고 있으며, 이처럼 정규직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다양한 비임금노동의 확대를 통해 오늘날 자본은 훨씬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23)</sup>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밤의 4차

21) Guy Standing, openDemocracy, 2014.03.04, "Why the precariat is not a "bogus concept" <https://www.opendemocracy.net/en/why-precariat-is-not-bogus-concept> (최종검색일 2021.10.20)

22)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비판이론가 호네프트(Axel Honneth)는 오늘날 노동사회로부터 벗어나려는 비판적 사회이론의 경향을 "모든 희망을 노동의 해방과 인간화에 걸었"다가 "이제는 실망하여 노동세계로부터 등을 돌리고 생산과는 거리가 먼, 완전히 다른 주제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상 "노동세계로부터의 지적 후퇴"라 명명하고, 노동사회의 종언 및 노동의 종말에 대한 각종 디스토피아적인 예측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생활세계에서 노동이 갖는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xel Honneth, "Work and Recognition: A Redefinition," 강병호 역, "노동과 인정(認定): 새로운 관계규정을 위한 시도," 『시민과세계』 15(2009), 392.

산업혁명론이 기술투입의 계기로써 자본-노동 간의 계급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을 무시하고 기술결정론을 통해 단선적으로 노동사회의 종언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이 만연해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카펜치스의 논의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자본의 노동 수요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바로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한편으로 노동일 중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노동부분/노동시간의 증가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 노동집약적인 비임금 및 저임금 노동영역의 확장을 통해, 자본이 노동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고용노동의 종말”<sup>24)</sup>이 임박했다고 얘기되는 “노동 없는 성장이 가능한 노동 없는 사회”<sup>25)</sup>에서, 정작 우리는 노동/노동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더욱 늘어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사회가 처한 곤경은 노동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역사적 목적이자 진보정치를 떠받치는 지지대로 오랫동안 간주되어온 임금노동에 인구 대다수가 충분히 접근할 수 없게 된 상황”과 맞물려 ‘성장 없는 일자리들’(growthless jobs), 즉 저임금은 물론이고 비임금 수당도 거의 없는 낮은 생산성을 지닌 일자리들의 거대한 확산이다.<sup>26)</sup> 이는 저임금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산업이 전(全)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데서 명확히 입증된다.

23) George Caffentzis, *In Letters of Blood and Fire: Work, Machines,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서창현 역, 『피와 불의 문자들: 노동, 기계, 화해 그리고 자본주의의 위기』 (서울: 갈무리, 2018), 130-138.

24) 이동화,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 125.

25) 조영호, “4차 산업 혁명과 노동윤리,” 63.

26) James Ferguson, *Give a Man Fish: Reflections on the New Politics of Distribution*, 조문영 역, 『분배정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서울: 여문책, 2017), 32.

한편 베너너브에 따르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평균실업률은 80년대와 90년대에 상승했고,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지난 십 년간 실업률은 과거의 경기 후퇴 이후보다 느린 추세이긴 해도 대체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서 주장하듯이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자리가 즉각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sup>27)</sup>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노동 수요의 하락이 표현되는 형식이 대량실업의 발생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의 위기, 즉 노동의 수요 저하가 표현되는 방식이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이 말하는 것과 같은 당장의 일자리 소멸이나 대량실업의 발생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 고용 및 불안정 노동의 확대라는 점은 최근의 한국의 고용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21년 1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지만, 2020년 청년 공식실업률은 9.0%로 2019년의 8.9% 대비 소폭(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더욱이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노동시장의 위축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큰 폭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노동의 종말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스토피아적 파국은 당장 일어나지 않고 있다.

27) Aaron Benanav,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Work 2,” 이종임 역,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창작과비평』 48(2020), 354.

28)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1), 25-35.

### 3. 생산성 역설

또 다른 쟁점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자본주의 시대구분에서 현재의 산업 발전 단계를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 시기의 자본주의를 과연 ‘디지털’과 ‘네트워크’(인터넷)의 결합에 기초한 정보혁명으로 불리는 3차 산업혁명과 충분히 구별되는, 새로운 단계로서의 4차 산업혁명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예컨대, 슈밥보다 불과 몇 년 전에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발표한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종료를 선언하고 4차 산업혁명의 개시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sup>29)</sup>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현상들은 모두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제3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연장선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도 정보만 있고 기반시설과 관련 없는 “가상의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sup>30)</sup> 미국의 거시경제학자 고든(Robert J. Gordon) 역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속에 불과”할 뿐이며,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 지속되고 있을 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sup>31)</sup>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고든이 리프킨처럼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리프킨이 주장하는 3차 산업혁명조차도

29) Jeremy Rifkin, The Huffington Post, 2016.01.14, “The 2016 World Economic Forum Misfires With I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me” [https://www.huffingtonpost.com/jeremy-rifkin/the-2016-world-economic-f\\_b\\_8975326.html](https://www.huffingtonpost.com/jeremy-rifkin/the-2016-world-economic-f_b_8975326.html) (최종검색일 2021.10.20)

30) 김태규, 한겨레 신문, 2019.10.24, “제러미 리프킨 화석연료 대체할 디지털 3차 산업혁명 진행중,”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914388.html> (최종검색일 2021.10.20)

31) 김환영, 중앙일보, 2017.07.26, “AI가 이끌 4차산업혁명? 그런 건 없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789342#home> (최종검색일 2021.10.20)

1~2차 산업혁명에 비하면 산업혁명이라 할 만큼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본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산업혁명의 성립 요건을 “① 산업화 4대 요소 중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 ②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산업 문명을 창출 ③ 큰 폭의 생산성 증가”를 꼽는다.<sup>32)</sup> 그중에서도 고든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바로 생산성이다. 그는 1994년 이후 미국 경제에서 약 10년간 소폭으로 나타났던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흔히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3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디지털네트워크 경제의 효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3차 산업혁명은 엔터테인먼트 등 협소한 분야에만 영향을 줘 성장을 끌어내는 힘이 떨어지며 2004년 이후에는 그마저도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1~2차 산업혁명에 준하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sup>33)</sup> 따라서 기술진보의 명확한 지표인 생산성 변동의 장기적 추이를 실증적 근거로 삼아 3차 산업혁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개진했던 고든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실재 역시 부정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4차 산업혁명까지 암묵적으로 포함하여 3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고든의 이러한 입장은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과 별개의 새로운 혁명이든 아니면 그 연속선상에 있는 한 국면에 불과하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포괄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적 동역학을 자본주의 시대구분에 반영하기 위해선 기술진보뿐만 아니라 ‘생산성’(productivity)이나 ‘이윤율’(rate of profit) 같은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32) 김석관, “산업혁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127; 송성수,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개와 4차 산업혁명론의 위상,” 『과학기술연구』 17(2017), 34-35.

33) Robert J. Gordon,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 The U.S. Standard of Living Since the Civil War*, 이경남 역,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서울: 생각의힘, 2017), 850-854.

고든은 3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논점, 즉 기술진보에 반비례하여 생산성이 정체되고 있는 이른바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198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MIT의 솔로우(Robert M. Solow)는 당시의 통계에 근거하여 “여러분은 생산성 통계를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컴퓨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컴퓨터의 보급률은 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생산성은 증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34)</sup> ‘솔로우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생산성 역설’의 개념은 최근에 고든에 의해 3차 산업혁명의 생산성을 저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되면서 4차 산업혁명 논쟁에서도 중요한 논점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sup>35)</sup>

### III.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의 위기

#### 1.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그렇다면, 국내 신학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연구들은 왜 실증적·경험적 근거를 무시하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단정 짓고, 나아가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으로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생산성 역설의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디지털화가 고용시장 및 노동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결정론적으로 사고하는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밋의 4차 산업혁명론에만 일방적으로 준거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슈밋의 4차 산업혁명론은 크게 두

34) Robert M. Solow, “We’d better watch out,” *New York Times Book Review* July(1987), 36.

35) 조원영, “제4차 산업혁명과 재등장한 생산성 역설 논쟁,” 『월간SW중심사회』 3(2018),

11-19.

줄기의 선행 논의를 배경으로 탄생”했는데, 한 줄기는 앞서 언급한 ‘자동화 담론’이고, 다른 줄기는 이제부터 살펴볼 “2011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운동”이라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유행하기 이전인 2011년, 독일의 주요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플랫폼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프레임으로서, 산업 전(全)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취지가 담긴 독일 제조업의 차세대 전략을 의미한다.<sup>36)</sup> 그러나 생산 기술과 생산조직의 변화는 당연히 노동의 질과 노동의 조직화 방식은 물론 자본-노동의 계급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인더스트리 4.0은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협력 및 동원과 같은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sup>37)</sup> 무엇보다도 인더스트리 4.0이 시행되면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의심하는 노동계의 우려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는 노동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sup>38)</sup> 그리하여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의 쉼레 개념으로 ‘노동 4.0’(Arbeit 4.0) 기획을 2015년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인더스트리 4.0에 수반되는 고용시장 및 노동세계의 변화를 예측하며, 경제와 노동의 디지털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도해왔다.<sup>39)</sup>

36) 김은 외,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 독일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인더스트리 4.0의 모든 것』 (서울: 클라우드나인, 2017).

37) 문선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국제노동브리프』 14(2016), 43.

38) 김성국, “제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Arbeit 4.0’의 과제와 전망,” 『유라시아연구』 15(2018), 117; 임윤택, “디지털화 과정에서 노동과 기술의 문제: 독일 산업 4.0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5(2019), 147.

39)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의 추진 과정, 그리고 『노동 4.0 백서』의 출간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논의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황기돈, “독일의 노동 4.0 백서: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에 대한 청사진,” 『경상논총』 35(2017), 85-105;

가령 독일연방노동사회부(BMAS: Bundes 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가 발행한 『노동 4.0 백서』에서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경우 “27개 업종(가령, 소매업, 제지 및 인쇄업, 공공행정)에서 총 7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지만, 13개 업종(가령, 기계 공학, IT 서비스, 연구개발)에서 총 1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사라진 일자리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일자리는 약 25만 개 더 창출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자 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sup>40)</sup> 이는 기술진보로 인해 기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고용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출현하여 대규모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산업 사회학의 기술 연구와도 상통하는 예측이다.<sup>41)</sup> 이처럼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의 가능성을 상쇄시키는 효과들이 언제나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업 활동에 큰 변화가 생기지만, 다른 한편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직업과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sup>42)</sup>

독일의 노동 4.0 기획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일자리의 축소나 대량실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증

---

김경래, “독일 Industrie 4.0의 특징: 노동 4.0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8(2018), 3-26; 김호균, “독일의 ‘사회국가 4.0’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37(2019), 1-24; 이승현,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인디스트리 4.0과 노동 4.0의 전개 상황,” 『국제노동브리프』 18(2020), 94-109.

40) BMAS, *Weissbuch Arbeiten 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역, 『노동 4.0 백서』, 미출간, 48.

41) 이인재,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패러다임,” 『선진화 정책시리즈』 2(2017), 232;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계의 도입이 노동생산성과 노동력 가치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성낙선, “맑스, 잉여가치율 그리고 기술진보,” 『경제학연구』 55(2007), 73-75를 참조하라.

42) 이상호, “디지털화의 노동과 일자리 효과,” 『경상논총』 36(2018), 31.

대가 노동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앞서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을 향해 제기했던 두 번째 쟁점인 생산성 역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술적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은 기존의 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동화된 대량생산체제인 인더스트리 3.0과 달리,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센서와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빅데이터에 기초하여 사용 가능한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산체제의 단계를 가리킨다. 인더스트리 4.0의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되는 CPS는 사물인터넷(IoT)과 같이 언제나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리적인 실제의 대상이나 프로세스를 가상의 대상이나 프로세스와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그것은 가상의 세계와 실제의 물리적 세계를 통합하여 멀리 떨어진 곳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스템의 역동적인 운용을 가능케 한다. 인더스트리 4.0에서는 이러한 CPS를 활용하여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를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생산기술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sup>43)</sup>

이처럼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 방식의 수준에서 제조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개인적 요구에 맞춘 제품의 생산 가격을 맞추는” CPS의 활용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및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의 생산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더스트리 4.0 담론은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지속되어온 생산성 역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자신한다.<sup>44)</sup> 그러한 기대 덕분에, 2011년 독일의 ‘인

43) 김은 외,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 45-46; 김인숙·남유선,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서울: 호이텍북스, 2016), 60.

44) 김주희, “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 『세계정치』 28(2018), 63.

더스트리 4.0' 계획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곧이어 2012년 미국의 '제조 혁신 국가네트워크(NNMI)' 구축계획이 발의되고, 이에 질세라 2015년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및 인도의 '디지털 인디아가 거의 동시에 발의되었으며, 2016년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계획이 발표되고, 마침내 2017년 한국에서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출범하는 일련의 사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혁신을 목표로 한 4차 산업혁명론을 제조업 선도국들이 일제히 주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본주의 위기를 신기술 담론을 통해 돌파하려는 신자유주의 국가들의 합리적인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45)</sup>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시되는 사이버물리시스템과 같은 기술혁신이 그동안 정제된 생산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조업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적극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 2. 불완전 고용 및 불안정 노동의 확대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실제로 하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론에서는 일자리 소멸과 대량실업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 생산성 역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노동 사회의 위기를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두 가지 쟁점은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제기된다. 우선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의 일자리 축소 및 대량실업의 발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역시 “산업의 네트워크화, 유연화와 디지털화

45) 박홍서·남수중, “자본의 이윤율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대응: 4차 산업혁명론의 비판적 해석,” 『사회과학연구』 29(2018), 296.

로 인한 기술력, 사회적 가치, 고용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인정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노동의 변화는 “서로 다른 부문, 기업, 기능과 연계된 상이한 직업 활동과 자격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분단구조가 더욱 강화”되리라는 점이다.<sup>46)</sup> 디지털화로 인해 직접적 인간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퇴출되진 않겠지만, “고객 개인별 요구의 실시간 반영, 생산의 속도와 유연성 제고, 각종 의사결정의 최적화, 새로운 가치사슬 및 수익모델 구축”<sup>47)</sup> 등과 같은 자본의 목적에 부합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동의 형태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 4.0 백서』조차 일자리의 양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자리의 구성요소의 변화에 따라 취약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와 관련하여 임금 및 소득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48)</sup> 그리하여 차라리 “고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양극화로 인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대두될 위험에 대비해 노동자들에게 최소임금,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지원 제도의 마련을 제시”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sup>49)</sup> 노동유연성의 강화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을 실제로 하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론은 고용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노동세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노동자가 기업에 고용되어 안정적으로 생계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축소와 대량실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46) 이상호, “디지털화의 노동과 일자리 효과,” 41.

47) 황기돈, “독일의 노동 4.0 백서,” 88.

48) 김성국, “제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Arbeit 4.0’의 과제와 전망,” 123.

49) 김경래, “독일 Industrie 4.0의 특징,” 17.

더 많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결국 그 일자리라는 것이 대부분 노동유연화의 가장 극단적 형태인 ‘플랫폼노동’으로 대변되는 불완전 고용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 점점 더 자명해지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인더스트리 4.0에선 “투자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증가가 생산성 증가, 경쟁력 향상,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sup>50)</sup> 생산성 역설의 해결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관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생산성 역설의 개념을 마르크스의 비판적 가치론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자. 마르크스의 이론 틀로 보자면, 생산성 역설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이 사용가치, 즉 물질적 부의 거대한 증가를 발생시키지만, 그에 비례하여 단위 시간당 가치의 장기적인 증가를 발생시키진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마르크스가 “물질적 부의 양이 증가하는데도 그 가치 크기는 그에 상응하여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생산성 역설의 근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데, 그의 말대로 “이 같은 상반된 변화는 노동의 이중적 성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비판적 가치론의 관점에서 노동생산성의 모순적인 동역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51)</sup>

마르크스에 따르면, 상품에 대상화된 두 가지 형태의 노동, 즉 상품의 구체적 유용성을 생산하는 구체노동과 상품의 화폐적 가치를 생산하는 추상노동에 상응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의 사회적 부(富), 곧 ‘물질적 부’(material wealth)와 ‘가치’(value)이다.<sup>52)</sup> 구체노동의 대상화된 물질적 부(富)는 생산된 생산물들의 양과 질과 상관관계를 이룬다. 부(富)의 물질적 형태로서, 물질적 부(富)는 다양한 종류의 구체노동들의 대상화, 자연

50) 이상호, “디지털화의 노동과 일자리 효과,” 39.

51) Karl Marx,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Erster Band, Der Produktionsprozessdes Kapitals, MEW(Marx-Engels-Werke) Band 23*, 강신준 역, 『자본 I-1』 (서울: 길, 2008), 101.

52) 위의 책, 87-102.

에 대한 인류의 적극적 관계를 표현한다. 반면에, 가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부(富)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적 형태로서 추상노동, 더 정확히는 가치를 생산하는 실천적으로 추상적(抽象的)인 노동의 대상화이다.<sup>53)</sup>

이러한 사용가치와 가치의 질적인 차이점을 노동생산성에 반영했을 때, 상이한 측면에서 측정되는 두 개의 노동생산성 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 즉, 사용가치에 상응하는 ‘사용가치 노동생산성’(또는 ‘노동의 사용가치 생산성’)과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 노동생산성’(또는 ‘노동의 가치 생산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sup>54)</sup> 사용가치 노동생산성은 “일정량의 노동이 일정량의 생산수단 집합의 도움을 받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의 ‘사용가치의 양’<sup>55)</sup>으로서 ‘물량/노동량의 비율로 측정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가치 차원에서의 노동생산성의 증대란 “자본이 동일한 가치와 더 많은 사용가치량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적은 필요노동을 구매”하거나 “더 적은 필요노동이 동일한 교환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사용가치량을 창출”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sup>56)</sup> 반면에, 가치 노동생산성은 “일정량의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치의 양”으로서 ‘가치량/노동량’을 단위로 삼아 측정할 수 있다.<sup>57)</sup>

그런데 마르크스의 이론 체계에서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설명된다.<sup>58)</sup> 그렇기

53) Moishe Postone,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A Reinterpretation of Marx's Cr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54.

54) 김창근,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역설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저,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 (서울: 한울, 2013), 84.

55) 위의 논문, 84.

56) Karl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김호균 역,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서울: 그린비, 2007), 411.

57) 김창근,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역설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84-85.

58) Karl Marx, 『자본 I-1』, 547.

에 평균적인 노동생산성이 증대되면 단위 시간당 평균적으로 재생산되는 상품의 수도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단일한 상품의 생산에 요구되는 사회적 필요 재생산 노동시간의 양이 줄어들고, 따라서 각 상품의 가치도 줄어든다. 개별 자본의 관점에서선 오직 가치증식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했을 뿐인데, 그러한 혁신이 ‘경쟁의 강제법칙’을 따라서 산업부문 전체에 걸쳐 일반화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규정하는 사회적 필요 재생산 노동시간이 감소하여 개별 상품의 가치량이 다시 줄어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성 역설은 노동의 사용가치 생산성에 정비례하여 가치 생산성이 증대하진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두 개의 생산성의 변화 방향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의 결과 노동의 사용가치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라도, 노동의 가치 생산성은 그러한 사용가치 생산성의 증가율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훨씬 더 낮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또는 전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이다.<sup>59)</sup>

### 3. 노동의 외부화

3차 산업혁명 이후로 생산성 역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자본의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제조업 혁신 전략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을 실체로 하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론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더 정확히는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해 시도되는 노동생산성 증대의 결과로 정작 가치증식의 전제이자 상품가치의 실제인 인간의 노동력을 생산과정에서 퇴출시키는 모순으로 인해, 끊임없이 가치화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던 자본이 찾아낸 하나의 잠정적인 해결책인 셈이다. 노동과정의 기술적·조직적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필

59) 김창근,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역설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86.

연적으로 노동 수요의 저하를 초래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노동력의 대규모 퇴출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은 이제 CPS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부터, 소비와 폐기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노동력의 사용이 “비동시적이고(asynchron) 탈중심적으로(dezentral) 이뤄지고, 아웃소싱 방식으로 생산 및 물류기지의 이전이 훨씬 더 용이”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을 만들어냈다.<sup>60)</sup>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는 이전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차별화와 이동성을 허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외 행위자들을 가치창출 과정에 포섭시킨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에 근거한 네트워킹을 통해 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제어하고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공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의 광범위한 차별화가 추가적인 거래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의사소통 및 조정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더 빠른 현실화를 촉진시킨다.<sup>61)</sup>

이렇게 법률적 고용관계의 기준을 파괴하고 새로운 노동력 동원의 형태를 취하면서 초(超)기업적 차원에서 재조직화되는 사회적 노동을 일반적으로 ‘플랫폼노동’(platform work)이라 부른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전과 만나면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에서 특히 “하청노동자, 도급노동자, 프리랜서,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종류의 간접고용과 독립계약자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노동 확산의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표준적인 고용관계

60) 박지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강원법학』 54(2018), 168.

61) 이상호, “디지털화의 노동과 일자리 효과,” 35.

가 해체되고, 1980년대 이후 불안정 고용이 확산되는 현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sup>62)</sup> 플랫폼 경제에 관한 최근의 노동사회학 연구들 역시 대체로 플랫폼노동의 부상을 노동유연화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본주의의 변화된 가치 창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를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노동의 자영업화(self-employmentization)가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곧 ‘노동의 주체화’ 과정인 것은 아니다. 새롭게 등장한 자영업자들은 자본가들이 부담하던 거래비용을 떠안고 수요부족의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극도로 낮은 진입장벽을 지닌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자본은 거대한 자유경쟁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과 지대를 가져가면서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sup>63)</sup>

여기서 플랫폼 장치는 노동력 상품을 거래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노동의 거래비용)을 거의 0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플랫폼 경제의 생산양식이 기존의 아날로그 산업경제의 생산양식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도<sup>64)</sup>, 그러한 현상이 구조적으로는 3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초하여 금융적·신자유주의적·노동배제적 축적체제에서 일관되게 이어져 온 노동의 외주화 및 노동유연화 경향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한 것임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과정의 표준화와 탈숙련화가 개별

62) 장지연 외,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7), 39; 황덕순 외,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6), 5.

63) 장지연 외,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176.

64) 김수영, “왜 고용관계만으로는 플랫폼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2.

기업에 특화된 숙련기술의 필요성을 현저히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원격으로 노동과정 및 노동생산물을 쉽게 통제하고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자본은 노동을 내부로 포섭하는 전략이 아닌 외부화하는 방향으로 축적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sup>65)</sup>

결과적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의 4차 산업혁명 세계에서는 외주, 용역, 사내하청, 위탁, 특수고용직 등의 점점 더 다양화되고 차별화된 고용형태로 이루어지는 임시일용직과 단순노무직 등의 저숙련·저임금·불완전 고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 및 노동이 더 이상 '비정규직'(irregular work)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인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정규적인'(regular) 고용의 형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론은 첨단 기술혁신과 자동화가 곧바로 일자리 소멸과 대량실업으로 표현되는 노동의 종말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과는 노동의 미래를 전혀 다르게 전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사회를 노동의 종말 이후의 노동사회가 아니라 불완전 고용 및 불안정 노동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새롭게 변형되는 동시에 노동을 매개로 한 자본의 지배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그런 모순적인 형태의 노동사회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의

65) Christian Marazzi, *The Violence of Financial Capitalism*, 심성보 역,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부채위기를 넘어 공통으로』 (서울: 갈무리, 2013), 72-73. 마라찌는 자본이 노동을 외부화하는 현상을 “포드주의 시절처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즉 임금)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인 생산과정 외부에서 생산되는 가치를 추출하고 포획하는 장치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진” “가치생산의 외부화로 명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오늘날 자본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소비자 또는 사용자들에게 생산과정을 외부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잉여가치 추출 방식을 찾아낸 것이다.

변형 및 재구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변형 및 재구성되는 노동사회에선 고용관계, 임금/소득, 사회보험을 아우르는 다양한 측면들에서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플랫폼노동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중심을 이루게 되면서, 그러한 노동의 담지자들이 계급적으로 프레카리아트화되는 현상이 일반화된다. 노동자들을 “프레카리아트식 생존 방식”, 즉 “일과 생활 방식을 통해 얻어지는 보장된 정체성이나 발전에 대한 의식이 없이 현재를 사는 것”으로 이끄는 “압력과 경험에 예속”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확립하는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sup>66)</sup> 따라서 일자리 소멸이나 대량실업의 발생이 아니라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동역학이라는 논점을 끌어낼 수 있다.<sup>67)</sup>

#### IV.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평가

##### 1. 불안정성의 일상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가 이와 같이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현상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했을 때, 윤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말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불안정성의 일상화라는 윤리적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의 위기를

66) Guy Standing,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김태호 역,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서울: 박종철출판사, 2014), 42.

67) 고든 역시 3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한 “컴퓨터 시대가 초래한 문제는 대량실업이 아니라 버섯하고 안정적인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과 “그런 일자리는 로봇과 알고리즘뿐 아니라 세계화와 해외로 아웃소싱하는 관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아울러 비교적 임금이 낮은 육체노동에서만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노동의 종말이 아닌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를 현시대의 노동문제로 규정한다. Robert J. Gordon,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854.

특징짓는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삶 전반의 ‘불안정성’(precarity), 즉 소모 가능성 및 폐기 가능성으로 표현되는 잉여성에 대한 극도의 의식적·감각적 불안함을 노동담지자들의 삶 속에서 산출하고 있다. 그렇기에 노동담지자들이 이러한 분노, 아노미, 걱정, 소외와 같은 감응적 차원을 동반하면서 안정적이지 않고 안전하지 않으며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적응하게 되는 과정, 즉 불안정성의 일상화를 통해 프레카리아트화된 삶에 익숙해지게 되는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공식적·법률적 고용관계의 틀 외부에 있다는 이유로 노동과정 및 노동관계에서 프레카리아트에게 가해지는 일체의 ‘권리 부정’이 바로 그러한 불안정성의 일상화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를 구성하는 노동자들로 ‘경력이 없는 일시적노동자’, ‘일시적 일자리에 있는 사람’, ‘이른바 파트타임 근무자’, ‘독립적 하청업자’, ‘종속적 하청업자’, ‘콜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 ‘잠재적으로는 청년을 프레카리아트 수로로 실어 나르는 수단인 ‘인턴’ 등을 예로 드는데 그는 이러한 노동들의 공통점을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바람직한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불안한 형태의 노동”으로 규정하면서, 프레카리아트란 “일생의 직업이라는 느낌과 보장된 직업 정체성의 느낌을 제공하지 않는 신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sup>68)</sup> 왜 그들은 직업 정체성이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없을까? 프레카리아트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민에 비해 제한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즉 시민으로서 법·제도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류민’(denizens)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sup>69)</sup> 그렇기에 프레카리아트에 속한 이들은 오늘날 전(全)지구적 자본주의 계급구조에서 “포드주의 시대의 계급 타협의 결과 안정

68) Guy Standing, 『프레카리아트』, 38-42, 58.

69) 위의 책, 36.

적이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핵심노동계급보다 아래'에 있는 최하층의 노동자라 할 수 있다.<sup>70)</sup> 거류민이자 최하층 노동자라는 성격은 프레카리아트를 정치적 권리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프레카리아트가 거류민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이 공식적인 고용관계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노동과정 및 노동관계에서 기본적인 도덕적 능력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 즉 도덕적 능력과 자율성을 갖춘 평등한 존재로서 정치적 영역 및 공적 토론의 영역에서 한 사람의 주체로, 즉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정규직 또는 상용직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영(Iris Marion Young)에 따르면, 지배(domination)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할 때 또는 행위의 가능성 및 불가능성의 조건들을 결정할 때 행위주체로서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적 현상을 지시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적 조건 하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은 외부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sup>71)</sup> 이러한 지배의 개념을 프레카리아트에게 적용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왜 직업적 정체성이나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증대된 불안감과 ‘도덕적 좌절감’에 의해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sup>72)</sup>

프레카리아트라 불리는 최하층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라도 취업 상태에 있을 때, 즉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법률적 고용관계의 틀 안에서 일을 하

70) 박인권,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 불안계급 이론의 비판과 확장,” 『공간과사회』 27(2017), 43.

71) Iris M.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김도균·조국 공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2017), 99.

72) Judith Butler,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 (서울: 펠로스픽, 2018), 25.

고 있을 때조차도, 기업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에겐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할당된 “이른바 소모 가능성, 혹은 폐기 가능성이라는 고조된 인식” 속에서 “질병이나 인간의 유한성과 같은 것들에 대한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간다.<sup>73)</sup> 그러므로 그들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계약을 맺을 때조차도, “사회적 기억의 전통도 없고 안정적 관행, 도덕률, 행위규범, 호혜, 박애 따위가 스며든 직업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느낌도 없는, 경력에 보탬이 안 되는 일자리에” 놓여 있게 된다.<sup>74)</sup> 프레카리아트에게는 그들의 직장생활에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직업적 서사가 결핍되어 있으며, 결국 아무런 직업적 정체성이 없다는 관찰은 그들이 노동관계를 구성하는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상 ‘거류민’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에 기인한다.<sup>75)</sup> 노동관계에서 타인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경험, 즉 “자신의 행동 또는 행동 조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적 조건에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자기 존중의 실패와 노동 기반의 직업 정체성 상실은 결국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가치부여의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sup>76)</sup>

## 2. 참여의 표준과 참여정의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로 인해 급속하게

73) Judith Butler, *Notes Toward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김웅산·양효실 공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서울: 창비, 2020), 25; Judith Butler & Athena Athanasiou, *Dispossession: The Performative in the Political*, 김웅산 역,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서울: 자음과모음, 2016), 77.

74) Guy Standing, 『프레카리아트』, 33.

75) 위의 책, 42-58.

76) Iris M. Young, 『차이의 정치와 정의』, 177-178.

격화되고 있는 불안정성의 문제를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즉, 그러한 윤리적 문제를 기독교사회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criterion)은 무엇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는 노동시장 보장, 고용 보장, 직무 보장, 근로안전 보장, 숙련기술 재생산 보장을 포괄하는 고용관계 차원에서의 노동 불안정성과 불안정한 임금/소득의 문제 외에도, 프레카리아트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에 기반을 둔 정체성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프레카리아트에 속하는 이들은 온갖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 고용관계의 틀 바깥에서 동원되었기 때문에, 노동관계에서 자신들의 노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와 노동을 비롯한 여타의 활동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한 조건의 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여할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 정체성도 소속감도 없는 상태로 자신들의 삶의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지배적인 노동관계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노동관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직무를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재규정된 공/사 경계 없는 ‘기능수행’(functioning)으로 변환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노동의 이행 방법이 사전에 특정되지 않는” 데서 오는 노동과정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계산에 능숙하고,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환경의 변수에 실시간적으로 적응할 줄 아는 존재”, 즉 동물이나 기계와 다를 바 없는 ‘반응하는 객체’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sup>77)</sup> 디지털 노동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유 없는 순수한 행위는 행위가 아니라 반응에 불과한 것이며, 반응은 동물이나 기계의 속성이자 진정으로

77) Alain Supiot, *La Gouvernance par les nombres*, 박제성 역, 『숫자에 의한 협치』 (서울: 한울, 2019), 261.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용성과 반응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노동관계의 항시대기 상태는 노동자들의 비인간화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sup>78)</sup>

스위스의 경제윤리학자 리히(Arthur Rich)의 사회정의론에서 불안정성의 문제를 기독교사회윤리학적으로 판단하는 데 적합한 윤리적 기준을 찾을 수 있다. 리히는 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부합하는지, 즉 사회정의에 적합한 경제제도를 준칙(Maxim)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정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sup>79)</sup> 특히 리히가 사회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제시한 ‘인간부합적인 것’(das Menschengerechte)의 기준들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기준, 즉 사회구조와 관련된 범주인 ‘참여의 기준’에 근거할 때,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의 부정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sup>80)</sup>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의 지배적 형상인 프레카리아트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직업적 정체성의 결여와 그에 따른 자기 존중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와 소유와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의 기준에 근거하여 윤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의 불의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리히에 따르면, 참여의 기준은 인격과 직접 관련되는 다른 기준들과 달리 “사회적인 권력구조, 법률구조, 행정구조, 지시구조, 소유구조 등이 그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 혹은 관련자들로 하여금 이 구조들에 근거한

78) 박계성, 『사회정의를 향한 백년의 꿈』 (서울: 무빈다방, 2019), 10.

79) 최경석, “기독교 경제윤리의 눈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154.

80) 리히가 제시하는 인간부합적인 것, 즉 인간적 정의의 일곱 가지 기준들은 ‘피조성의 기준’, ‘비판적 거리의 기준’, ‘상대적 수용의 기준’, ‘상관성의 기준’, ‘이웃됨(공동인간성)의 기준’, ‘공동피조성의 기준’, 그리고 ‘참여의 기준’이다. 경제의 근본문제에 사회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규정하는 리히는 이와 관련하여 일곱 가지 기준들 가운데 특별히 “이웃됨, 공동피조성, 상관성의 기준 이외에도 참여의 기준이 전면에서 부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thur Rich, 『경제윤리 1』, 187.

권력, 법률, 권능, 재화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방적인 특권의 형성을 구조적으로 저지시키는” 것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sup>81)</sup> 인간성은 제도적 차원과 무관한, 즉 제도적 매개를 무시한 타인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파악될 수 없고, 오직 총체적 차원에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 정의를 구성하는 규준에 사회구조적 차원이 들어와야만 한다.<sup>82)</sup> 그런 맥락에서 리히의 사회윤리학은 “인간의 계획의 근거한 모든 질서, 제도, 기구”가 윤리의 관계 영역들, 즉 ‘나와 나 자신’(개별적 측면)과 ‘나와 너/너희’(인격적 측면), 그리고 ‘나/우리와 그것’(생태학적 측면)에 미치는 제도화의 효과, 또는 그러한 관계 영역들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매개를 중요하게 다룬다.<sup>83)</sup>

특히 리히는 이러한 제도화의 효과를 기업조직 내에서 성립하는 나와 너/너희의 관계에 적용하여, “노동자들과 그들의 감독자들 사이의 관계는 그들 사이의 인간관계 유형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의 지도력 형태나 의사결정의 구조에 의해 더 많이 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다.<sup>84)</sup>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성의 근본적인 규준들 가운데 하나인 ‘참여의 규준’은 사회생활의 사회적 관계들이나 사회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참여의 가능성들이 줄어드는 것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성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부정의(不正義)로 간주한다. 리히는 “참여의 정신을 거역하는 사회구조들이 비인간적인 것, 따라서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제도에 의해 매개된 공동생활에서 참여적인 구조들이 없을 경우, 그와 같이 참여의 권리가 부인된 상태를 “사회적 현실 영역의 구조가 비인간적으로 짜여”

81) 위의 책, 228.

82) 위의 책, 227.

83) 위의 책, 53-61.

84) 위의 책, 59.

있는 불의한 상황이자, “처분권과 결정권이 소수의 수중에 독점됨으로써 독재적인 구조”가 확립된 지배의 상황으로 파악한다. 이처럼 참여의 기준에 근거할 때, 사회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 참여정의의 실현을 필수요건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sup>85)</sup>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리히의 사회윤리학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에 의해 수반되는 불안정성의 일상화를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참여정의를 훼손하는 사회적 부정의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 3. 노동담지성과 참여소득

리히에 따르면, 사회윤리학의 최고원리로서 인간적 정의의 기준들(criteria)은 다른 범위의 경험에서 있는 기준들과 관련해서도 유용하고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어야 할, 즉 “언제나 해석학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경험적 확신의 영역에 속한다.<sup>86)</sup> 이 기준들을 가지고 사회적 구조들 및 과정들의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속에서 인간적 정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들이 곧바로 세계 안에서 인간적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해주진 않는다는 데 있다. 강원돈의 지적대로, 기독교사회윤리학에서 윤리적 판단 기준은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 투명해야 한다는 일종의 절대적인 요구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한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부터 “대안정책의 구상을 직접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87)</sup>

85) 최경석, “참여정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35(2016), 365.

86) Arthur Rich, 『경제윤리 1』, 116.

87) 강원돈, “책임윤리의 틀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신학연구』 41(2000), 356.

그러므로 사회적 사건들의 구조들 및 과정들의 한가운데서 보다 인간적으로 정의로운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의 지침들은 원칙적인 기준들로부터 직접 연역될 수 없고, 오직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 비판의 성과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사실들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때만 획득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게 사회과학적 정확성을 담보하는 사실부합적인 것에 의지할 때만 인간적 정의의 기준들이 평가와 결정의 지침으로서 분석에 도입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보다 인간부합적인 것을 세계 속에 관철시킬 수 있는 행위의 지침을 기독교사회윤리학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그것은 윤리적 판단의 기준들과 대안적인 제도 형성의 구상 사이에서 그 둘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실천적 준칙들’(practical maxims)로 사회정의의 지침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sup>88)</sup>

그러한 맥락에서,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적 준칙으로 ‘노동담지성’의 개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노동법학자 쉬피오(Alain Supiot)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은 현재 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가 아닌가와 무관하게 “노동 상황의 단절과 이질성을 넘어 계속 유지되는 노동을 담지하고 있는 상태 또는 자격”을 갖고 있다.<sup>89)</sup>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사회의 전체 노동력을 구성하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갖고 있으며 그 자격으로 사회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담지성’(état professionnel)을 가진 ‘노동담지자’라는 것이다.<sup>90)</sup> 쉬피오는 이 개념이 “사회정의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를 함축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현장의 근본정신을 재확

88) Arthur Rich, 『경제윤리 1』, 196.

89) Alain Supiot, 『숫자에 의한 협치』, 388.

90) 박제성, 『하청노동론』 (서울: 퍼플, 2018), 157.

인했던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소개한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제3조 b항에서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능력과 지혜를 제공하고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에 고용되도록 할 것”을 모든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였다.<sup>91)</sup>

이러한 필라델피아 정신에 입각하여 쉬피오는 노동담지성 개념이 “노동 안에서의 해방을 촉진하고 모든 인간이 타인에게 유익한 일을 성취하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sup>92)</sup> 이렇듯 쉬피오의 노동담지성 개념은 비록 현재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혹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하고 있더라도,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을 어떤 식으로든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력’을 갖고 있는 노동담지자의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의 실현을 위한 윤리적 행위의 준칙으로 제시된 노동담지성은 그 제도적 실현 방안인 ‘참여소득 정책’(Participation Income scheme)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노동담지성이 프레카리아트적 노동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들에 입각한 대안정책의 구상과 그 실천을 위한 윤리적 행위의 준칙에 해당한다면, 참여소득은 바로 그러한 준칙에 따른 대안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참여소득은 영국 경제학자 앳킨슨(Anthony B. Atkinson)이 1996년에 한 논문에서 제안한 것으로,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수행한 모든 사회구

91) Alain Supiot, *The Spirit of Philadelphia: Social Justice vs. the Total Market*, 박제성 역,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2), 119.

92) Alain Supiot, 『숫자에 의한 협치』, 353.

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라 할 수 있다.<sup>93)</sup> 참여소득은 자산 및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개별성’을, 즉시 사용 가능한 화폐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정기성’과 ‘현금성’의 원칙을 ‘무조건적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과 공유하지만, 무조건적 지급이 아닌 사회에 대한 기여 내지는 참여라는 조건을 내세운다. 여기서 ‘참여’는 매우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로 간주될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회의 공통적 부의 (재)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94)</sup> 앳킨슨은 사회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 참여적 활동을 “생산 연령대에 있는 이들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돼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교육, 훈련,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집에서 유아기 어린이 또는 노약자들을 돌봄”이나 “인정된 단체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예시했지만, 어떤 일을 기여나 참여로 간주할 것인가는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의 공적 추론, 즉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95)</sup>

노동해방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에 입각하여 일할 수 있는 자유로움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성격을 공유하지만 조건적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참여소득이 노동해방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달리 참여소득은 노동과의 정합성을 갖고

93) A. B. Atkinson,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67/1(1996), 67-70.

94) C. Pérez-Munõz, “A defence of participation income,” *Journal of Public Policy* 36/2(2016), 169-193.

95) A. B. Atkinson, *Inequality: What Can Be Done?*, 장경덕 역, 『불평등을 넘어』 (서울: 글항아리, 2015), 308-312.

있기 때문이다. 참여소득 수급자들은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현금지급을 받는 대가로 어떤 사회적으로 유용한 또는 가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도록 요구받는다. 바로 이때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들’이 참여소득으로 하여금 노동과의 정합성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동안 신학 분야의 윤리학적 연구들은 일자리 소멸과 대량실업으로 표현되는 노동의 종말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 준거하여 대체로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노동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의 위기가 급격한 일자리 소멸이나 대량실업이 아닌, 불완전 고용 및 불안정 노동의 확대로 특징지어진다면, “그 자체로서는 소득이 분배될 뿐이지 사회적 필요노동이 분배되지는 않는다”<sup>96)</sup> 한계를 지닌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노동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재고(再考)될 필요가 있다. 노동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매개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노동의 재구성 과정에 개입하는, 즉 임금노동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들’을 확대함으로써 노동과 고용의 경계를 해체하는, 그래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의 사회적 재분배 프로그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참여소득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즉 이미 근로소득 내지는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이들에게도 참여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늘날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노동담당자들에게 초래하는 불안정성의 일상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96) 금민, “노동과 활동, 노동사회와 기본소득,” 월간 『좌파』 9(2014), 106.

##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자동화 담론에 편향된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은 기계와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진 ‘노동 없는 세계’의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사태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오히려 “기업의 효율성 원리에 따르는 노동 배제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생산체제가 지배적인 경향”이 된 가운데,<sup>97)</sup> 복잡하게 연결된 생산체계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 과로 병사, 과로 자살, 정리해고, 노조 탄압, 저임금, 비정규직 차별이 만연한 거대한 불안정 노동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절대 다수의 노동담지자들이 저임금 불완전 고용 중심의 노동시장에 보다 철저하게 종속되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정규직 임금노동에 기대했던 사회적 삶의 보장을 그러한 불안정 노동을 통해 계속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고용형태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득,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도 절대 다수의 임금노동자들이 중첩적이고 다차원적인 불안정성을 장기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불안정 노동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더 이상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조차도 여전히 시민들의 사회적 삶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노동사회의 위기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담지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데서 발생한다. 노동의 목적은 그녀가 사회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노동의 성과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적 가치, 사회

97) 이영희, “과학기술 시대의 인간 노동,” 『지식의 지평』 26(2019), 42.

적 존재로서의 의의를 인정받기 위함이며, 이는 긍정적인 자기 가치부여의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노동담지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노동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인정 획득이다.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노동담지자에게 자기 가치부여의 사회적 토대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만일 4차 산업혁명에 수반되는 노동유연성의 강화로 인해 노동담지자들의 삶 전반에서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노동세계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의 가능성들이 축소된다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성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노동이 여전히 사회적 가치부여의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중심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화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노동 중심의 사회구조가 개인들에게 행사하는 압력과 강제는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생산성 증대를 이윤의 증대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제조업 혁신 전략에서 노동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는 것과 별개로, 애초부터 노동담지자의 관점에서 노동은 생계를 위한 수익활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인정 획득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노동은 모든 노동담지자에게 상호주관적인 인정관계로 재의미화되어 있고, 긍정적인 자기 가치부여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고용관계, 임금/소득, 사회보험을 아우르는 “산업사회의 시민권적 규범”에서 모두 배제된 프레카리아트로 양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사회에선 그러한 노동의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목적에 관한 착상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를 넘어 신학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형태의 노동으로부터 해방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

명은 노동 중심으로 삶을 이해하는 근대사회의 생활세계와 조용하던 이른바 ‘정상적 노동’ 개념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불안전 고용, 불안정 노동, 비정규직, 임시직, 플랫폼노동 등의 다양한 ‘비정상적 노동형태들’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정상적 노동 개념의 해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탈(脫)노동사회를 상상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노동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과하신 거룩한 위임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는 기독교신학, 나아가 노동을 그 자체로 인간의 인간됨을 확증해주는 활동의 매개체로서 이해해온 기독교사회윤리학의 과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돈. “책임윤리의 틀에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신학연구』 41(2000), 348-368.
- \_\_\_\_\_. “교의학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위치.”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39-76.
- 금민. “노동과 활동, 노동사회와 기본소득.” 월간 『좌파』 9(2014), 83-107.
- 김경래. “독일 Industrie 4.0의 특징: 노동 4.0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8(2018), 3-26.
- 김석관. “산업혁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슈밤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학기술정책』 1(2018), 113-141.
- 김성국. “제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Arbeit 4.0’의 과제와 전망.” 『유라시아연구』 15(2018), 117-135.
- 김수영. “왜 고용관계만으로는 플랫폼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1-41.
- 김은 외.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 독일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인더스트리 4.0의 모든 것』. 서울: 클라우드나인, 2017.
- 김인숙·남유선.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서울: 호이테북스, 2016.
- 김주희. “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 『세계정치』 28(2018), 53-89.
- 김창근.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역설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저,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 서울: 한울, 2013, 69-88.
- 김태규. 한겨레 신문, 2019.10.24, “제러미 리프킨 화석연료 대체할 디지털 3차 산업혁명 진행중.”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914388.html> (최종검색일 2021.10.20)
- 김혜령. “제네바 종교개혁 정신에 비추어 본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기본권 보편 보장제도 성찰.” 『신학사상』 178(2017), 155-199.
- 김호균. “독일의 ‘사회국가 4.0’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37(2019), 1-24.
- 김환영. 중앙일보, 2017.07.26, “AI가 이끌 4차산업혁명? 그런 건 없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789342#home> (최종검색일 2021.10.20)

- 문선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국제노동브리프』 14(2016), 43-53.
- 박용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 사회생태윤리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41(2018), 101-132.
- 박인권.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 불안계급 이론의 비판과 확장.” 『공간과사회』 27(2017), 36-78.
- 박제성. 『사회정의를 향한 백년의 꿈』. 서울: 무빈다방, 2019.
- 박지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강원법학』 54(2018), 161-208.
- 박홍서·남수중. “자본의 이윤율 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대응: 4차 산업혁명론의 비판적 해석.” 『사회과학연구』 29(2018), 285-302.
- 성낙선. “맑스, 잉여가치를 그리고 기술진보.” 『경제학연구』 55(2007), 69-101.
- 송성수.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개와 4차 산업혁명론의 위상.” 『과학기술연구』 17(2017), 5-40.
- 유경동. “‘포스트-휴먼’(post-human)과 과학 기술: 4차 산업과 기독교 윤리학의 과제.” 『신학사상』 183(2018), 111-135.
- 유재덕. “4차 산업혁명 시대 신학교육의 방향.” 『신학과 선교』 57(2019), 171-206.
- 윤정현. “한국사회의 4차 산업혁명 수용과정과 대응전략의 시사점.” 『국가정책연구』 32(2018), 21-53.
- 이상호. “디지털화의 노동과 일자리 효과.” 『경상논총』 36(2018), 29-47.
- 이승현.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의 전개 상황.” 『국제노동브리프』 18(2020), 94-109.
- 이영희. “과학기술 시대의 인간 노동.” 『지식의 지평』 26(2019), 32-44.
- 이인재.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패러다임.” 『선진화 정책시리즈』 2(2017),
- 임운택. “디지털화 과정에서 노동과 기술의 문제: 독일 산업 4.0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5(2019), 123-153.
- 장지연 외.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7.
- 조성호. “4차 산업혁명시대와 기독교 영성의 발전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8(2018), 149-173.
- 조영호. “4차 산업 혁명과 노동윤리.” 『성경과 신학』 89(2019), 57-86.

- 조원영. “제4차 산업혁명과 재등장한 생산성 역설 논쟁.” 『월간SW중심사회』 3(2018), 11-19.
- 최경석. “참여정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35(2016), 341-368.
- \_\_\_\_\_. “기독교 경제윤리의 눈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읽기.”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151-173.
-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1.
- 황기돈. “독일의 노동 4.0 백서: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에 대한 청사진.” 『경상논총』 35(2017), 85-105.
- 황덕순 외.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6.
- Atkinson, A. B.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67/1(1996), 67-70.
- \_\_\_\_\_. *Inequality: What Can Be Done?*, 장경덕 역, 『불평등을 넘어』, 서울: 글항아리, 2015.
- Benanav, Aaron.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Work*, New York: Verso, 2020.
- \_\_\_\_\_.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Work 2.” 이종임 역,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창작과비평』 48(2020), 353-378.
- BMAS. *Weissbuch Arbeiten 4.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역, 『노동 4.0 백서』, 미출간.
- Brynjolfsson, Eric & McAfee, Andrew. *The Second Machine Age*, 이한음 역, 『제2의 기계시대』. 서울: 청림출판, 2014.
- Butler, Judith.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애도의 힘과 폭력』. 서울: 필로소픽, 2018.
- \_\_\_\_\_. *Notes Toward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김응산·양효실 공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서울: 창비, 2020.
- Butler, Judith & Athanasiou, Athena. *Dispossession: The Performative in the Political*, 김응산 역,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서울: 자음과모음, 2016.
- Caffentzis, George. *In Letters of Blood and Fire: Work, Machines,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서창현 역, 『피와 불의 문자들: 노동, 기계, 화폐 그리고

- 자본주의의 위기』. 서울: 갈무리, 2018.
- Ferguson, James. *Give a Man Fish: Reflections on the New Politics of Distribution*, 조문영 역, 『분배정치: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서울: 여문책, 2017.
- Ford, Martin. *Rise of the Robots*, 이창희 역, 『로봇의 부상』. 서울: 세종서적, 2016.
- Frey, Carl & Osborne, Michael.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2017), 254-280.
- Gordon, Robert J.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 The U.S. Standard of Living Since the Civil War*, 이경남 역,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서울: 생각의힘, 2017.
- Honneth, Axel. "Work and Recognition: A Redefinition." 강병호 역, "노동과 인정(認定): 새로운 관계규정을 위한 시도." 『시민과세계』 15(2009), 391-416.
- Marazzi, Christian. *The Violence of Financial Capitalism*, 심성보 역,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부채위기를 넘어 공통으로』. 서울: 갈무리, 2013.
- Marx, Karl.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김호균 역,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서울: 그린비, 2007.
- \_\_\_\_\_.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Erster Band, Der Produktionsprozessdes Kapitals, MEW(Marx-Engels-Werke)* Band 23, 강신준 역, 『자본 I -1』. 서울: 길, 2008.
- Pérez-Munõz, C. "A defence of participation income." *Journal of Public Policy* 36/2(2016), 169-193.
- Postone, Moishe.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A Reinterpretation of Marx's Cr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Bd.1,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강원돈 역, 『경제윤리 1: 신학적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의 원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 \_\_\_\_\_. *Business and Economic Ethics: The Ethics of Economic Systems*, Georges Enderle ed., David W. Lutz & Albert Wimmer trans., Leuven: Peeters, 2006.
- Rifkin, Jeremy. The Huffington Post, 2016.01.14, "The 2016 World Economic

Forum Misfires With It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me”  
[https://www.huffingtonpost.com/jeremy-rifkin/the-2016-world-economic-f\\_b\\_8975326.html](https://www.huffingtonpost.com/jeremy-rifkin/the-2016-world-economic-f_b_8975326.html) (최종검색일 2021.10.20)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바브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메가스터디박스, 2016.

Solow, Robert M. “We’d better watch out.” *New York Times Book Review* July(1987), 36.

Standing, Guy.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김태호 역,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서울: 박종철출판사, 2014.

\_\_\_\_\_. openDemocracy, 2014.03.04, “Why the precariat is not a “bogus concept” <https://www.opendemocracy.net/en/why-precariat-is-not-bogus-concept> (최종검색일 2021.10.20)

Supiot, Alain. *The Spirit of Philadelphia: Social Justice vs. the Total Market*, 박제성 역,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2.

\_\_\_\_\_. *La Gouvernance par les nombres*, 박제성 역, 『숫자에 의한 협치』. 서울: 한울, 2019.

Young, Iris M.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김도균·조국 공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2017.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03일

심사개시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3일

---

• 국 문 초 록 •

---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위기는 자동화 담론이 주장하듯이 일자리 파괴나 대량실업의 발생이 아니라, 불완전 고용 및 불안정 노동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노동사회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노동을 조직하는 형태가 변형되면서, 동시에 여전히 노동을 매개로 하여 자본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사회로 재구성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위기는 바로 그러한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의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형 및 재구성되는 노동사회에선 프레카리아트라 불리는 새로운 불안정 노동계급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노동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동시에 그런 불안정 노동조차도 여전히 대중들의 사회적 삶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로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부정의를 산출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를 참여의 기준에 입각하여 윤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사회의 위기를 진단한다.

**주제어:** 4차 산업혁명,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불안정성, 참여의 기준, 참여정의, 참여소득

---